

# '개발 바람' 에 수행환경 훼손 우려

## 각 지자체들 앞다퉈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추진 움직임

규제완화 바람을 타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제논리를 앞세워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 사찰수행환경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한반도 대운하 등의 개발바람이 우세해지자 지자체에서도 케이블카 문제를 재점검, 재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5월 29일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기 위해 '자연친화적 로프웨이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산림청 등 정부관계자를 비롯한 학계·시민단체·경제계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 15명으로 구성·운영된다. 협의체는 올 11월까지 매월 1회 회의를 열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자료를 통해 케이블카 설치가 합당한지 적극 검토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사찰부흥 사업 추진이 위한

으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0년대 초반 케이블카 바람이 거세게 일어났지만 지난 2004년 환경부에서 '자연공원법 공원지구 내 사도(케이블카) 설치 규정 지침'을 마련하면서 사실상 각 지자체들의 케이블카 논란은 중단된 상태였다. 2004년 지침에 따르면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이거나 생태자연도 1등급 이상이면 케이블카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케이블카 설치가 사회적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를 강력 주장하는 지역들이 한라산·설악산·지리산·다도해 등을 포함하는 청정환경지구이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와 양양군과 같은 지자체에서는 전경련 등의 지원사격을 받아 케이블카 설치를 강력히 원하며 대정부 성명서까지 발표, "케이블카 설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환경법을 개정하

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케이블카 설치를 원하는 지자체들은 경제적 실효성과 '케이블카 건설이 환경보호'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제주시는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로 관광객을 50만명에서 200만명으로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양양군에서는 "낙후된 지역 관광환경을 살리려면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등산로 훼손을 막아 오히려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측에서는 '어불성설'이라 맹비난하고 있다. 국립공원원칙을 지키는 시민들의 모임 윤주옥 사무국장은 "케이블카 설치가 환경보호"라는 논리는 우리가 산을 이용하는 기본 조건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국장은 "2004년 사도검토위원회가 만들어질 때도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지침을 마련했는데 이것을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며

"당시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변한 것도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불교계 역시 케이블카 설치를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조계종 사회부 관계자는 "케이블카가 경제성을 가지려면 주변 경관이 아름다운 사찰을 끼워 넣지 않을 수 없다"며 "사찰 경내지를 통과하거나 사찰을 정류장 등으로 이용하는 일이 생겨 사찰수행환경 훼손은 물론 경관·재산권·문화재 보존 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근 케이블카 설치 예상 지역 안에는 실제로 대구 선봉사 갖바위, 밀양 표충사 등이 들어있다.

한편 협의체의 한 관계자는 "현 상황을 보면 개발업자들이 지자체에 케이블카 설치를 제안하고 있는 것 같다"며 "케이블카 설치 문제는 케이블카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 도로, 관광지 개발계획으로도 이어지는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강진 기자

# "식수 공급·의료서비스 절실"

## JTS, 미안마 사이클론 피해실태 보고 기자회견



사원에서 숙식을 해결 중인 미안마 이재민들과 박지나 JTS 해외사업 본부장.



"안전한 식수 공급이 시급합니다. 정화시설과 의료보건 서비스 시설도 절실해요." 국제구호단체 JTS(이사장 범룡)가 5월 29일 서울 서초동 정토회관에서 미안마 사이클론 피해실태를 보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5월 20-26일 미안마에서 사이클론 피해지역 상황을 둘러보고 온 박지나 JTS 해외사업본부장이 참석, 생생한 현지 상황을 전했다.

박 본부장의 이번 조사는 미안마 정부가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비롯한 각국 NGO 대표들을 정식 초청해 진행한 '사이클론 피해실태 및 국제구호물자 분배 현황보고'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미안마 정부가 밝힌 사이클론 나르기스 피해자는 사망자 7만7000명 이상, 실종자 5만 5000명 이상이다. 또한 공공 재산피해는 3조 3500억 짜드(약 3조 3500억원), 민간재산파손피해액은 8조 3800억 짜드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사이클론 나르기스 최대 피해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이라와디 지역 위주로 이뤄졌다. 박 본부장에 따르면 이라와디 지역은 7개 지역이 붕괴했으며 특히 라부따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라부따에는 500개 마을 중 177개 마을이 사라졌고, 긴급구호로 설치된 127개의 텐트에 3000명이 살고 있을 정도

로 피해지역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 놓여 있다. 박 본부장은 현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한 식수공급과 의료보건 서비스라 강조했다. 또한 ▲병원, 보건소, 학교 등 공공시설 ▲식량 배급 ▲농경지 확보 ▲씨앗, 비료, 트랙터 등의 농자재 및 농기구 확보 등도 우선순위로 필요해 미안마 정부에서도 이를 먼저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5월 18-19일 이라와디 보글리 지역에 쌀 10톤을 지원한 JTS는 5월 28일부러 다시 이라와디 라인 부와와 보글리 지역에서 민간인 협력을 얻어 이재민들에게 쌀을 지원하고 있다. 김강진 기자

# "은평뉴타운 청담사 유적 보존"

## 문화재위 현장보존 결정

서울 은평뉴타운 예정지에서 발굴된 문화유적에 보존결정이 내려졌다. 문화재청(청장 이강민)은 5월 29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매장분과기 청담사터로 추정된 은평뉴타운 예정지의 진관내동 429번지 일대를 현장보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존 결정된 곳은 5월 2일 한강문화재연구원이 '삼각산청담사삼보

초(三角山淸潭寺三寶草)'라 적힌 평기와 5점을 발견한 진관내동 3-A 공구 일대와 인근 '자씨각(慈氏閣)'이란 현판이 걸린 보호각에 봉안된 석조미륵불상이다. 전문가들은 이 불상을 나뉠여초의 것으로 본다.

한편 문화유적 현장보존지에 도로 등을 내리던 SH공사는 재심의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논리에 맞서 문화유적 보존 논리가 정당한 힘을 발휘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동섭 기자

## "美 쇄고기 전면 재협상"

### 불교인권위 평화연대 성명

농림부(장관 정은춘)의 5월 29일 미국산 쇄고기 수입고시 발표에 불교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지원·한상범)와 불교평화연대(공동대표 진관·무원·황정·현종)는 5월 30일 공동 성명서에서 정부의 미국산 쇄고기 수입조치를 "전 국민

을 평생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으며 삶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는 한심한 처사", "국가의 자존을 내팽개친 노예근성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불교인권연대는 "미국산 쇄고기 반대는 정치적 대립이 아닌 국민의 정부에 대한 진심어린 충고임에도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해 국민에게 사법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미국산 쇄고기 수입 전면재협상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촛불집회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 "로스쿨선정 회의록 누락·조작"

## 동국대 정용상 교수, 교육부 자료에 의혹 제기

"로스쿨 선정을 위해 열렸던 회의록이 누락·조작됐다." 동국대 법과대 학장 정용상 교수는 5월 26일 '로스쿨 선정을 위한 법학교육위원회 회의록' 상당수가 누락

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으로 동국대가 교육부로부터 6종의 로스쿨 관련자료를 입수했으나, 제출된 회의록에는 로스쿨 선정원칙과 선정 및 인원배정에 관

한 사항이 없었다는 것. 정 교수는 "15회에 걸친 회의 중 제13차, 14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로스쿨대학선정 및 인원배정이 이루어졌을 것이나 누락됐다"며 "일부 회의록(제15차 회의록)은 조작한 흔적도 있다"고 말했다.

회의록 작성 기본형식인 '1. 개회 2. 보고(전회 회의록) 3. 심의안건' 등의 순서가 다른 회의록에서는 모두 지켜졌는데 제15차 회의에서만 '1. 개회, 3. 심의안건' 뿐으로 2번이 없었다는 것이 정 교수가 회의록 조작을 주장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간담회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해 근거가 없다"며 법원에는 "제13차, 14차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기로 결정함"이라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동섭 기자



## 지하철에서도 특정종교 홍보?

지하철역 장식 화면 하단에 특정종교의 교리를 명시한 문구가 적혀있다. 이와 관련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손인식)는 5월 23일과 26일, '지하철 역사나 전동차 내에서 특정종교를 홍보하거나 공공광고를 빙자한 과도한 선교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전국 광역시 8개 지하철공사에 '종교편향 시정과 종교중립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김강진 기자

## 불교방송 중에 구호쌀 전달

불교방송(이사장 영담)과 한중불교문화교류협회는 5월 29일 중국 베이징 국가 종교사무국에서 '중국 쓰촨성 지진 구호품 전달식'을 가졌다. 조동섭 기자

전달식에서 영담 스님은 쌀 60톤(4000만원 상당)을 짜지엔쯔 종교사무국 부국장에 전달했다. 이번 전달된 구호쌀은 3일 후 쓰촨성 종교사무국을 거쳐 이재민들에게 전해졌다. 조동섭 기자

**전선(케이블)\_연등승가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저등 승강장치\_대구 정성사    연등 저등 승강장치\_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LED 인등·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연등    천안 동심사    영가등    주름등    팔각봉축전등    청사초롱    육각조립등    공단등    오색등    칼라(보카시)연등

# 아름다운 등

미래의 소중한 꿈을 담아 삼보공양을 찬덕연등이 함께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빛깔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주름등·전선시공·영구위패·LED인등·LED전구  
공고: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리커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리커입니다. 캐리커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경고 합니다.